

광주·전남 대학들 '손에 손잡고' 통했다

지역대학 글로벌 혁신기획서 보니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 대학'에 포함된 광주·전남 대학들이 혁신과 파격을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와 글로벌대학위원회가 16일 '2024년 글로벌대학 예비 지정 대학'으로 선정한 전남대와 목포대(이상 단독 신청), 동신대(연합), 광주보건대(초광역 연합) 등은 혁신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들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5쪽 짜리 혁신기획서는 예비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벌대학위원회 심의 결과 상위권에 포함됐다.

총 109개교가 65개의 혁신 기획서를 제출했고 전남대 등을 포함한 15개 혁신 기획서가 예비지정을 통과했다.

전남대는 혁신기획서에 초광역 메가 캠퍼스 구축안을 제시했다.

광주(AI·인공지능)·여수(에너지·해양·관광)·화순(바이오헬스)을 특화산업 캠퍼스로 전환하고 고흥(우주항공)·나주(미래농업)은 도전산업 캠퍼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대 '초광역 메가 캠퍼스'·목포대 '글로벌 해양특화' 동신대 연합 '공공형 사립연합대'...보건대 '영호남 연합'

중국 온주 국제 캠퍼스, 베트남 하노이 바이오클러스터 등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수 유학생 유치에 나선 프로그램도 담았다.

목포대는 세계 유일의 친환경분야 연구 센터를 기반으로 무탄소 선박·그린 에너지 산업 중심의 '글로벌 해양특성화 대학'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전남도립대학과 통합을 이루는 한편, 지자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행복 캠퍼스타운'을 조성해 캠퍼스를 명소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동신대 연합은 공동의 거버넌스를 구축해 함께 혁신모델을 수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연합대학 무분에서 예비지정된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학 연합지·산·학 일체형 '지역 공공형 사립연합대학(UCC, University Community Collaboration)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 기획서를 제출했다. 동신대 연합에는 초당대, 목포

과학대학으로 꾸려진다.

지역공공형사립대학은 지역 발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운영하는 대학이다. 단일 정관, 단일 이사회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광역지자체와 대학, 기초자치단체, 지역혁신기관, 공기업, 지역기업이 연합이사회를 구성하며 전남도지사가 이사회의장을 맡는다.

동신대 연합은 3개 대학에서 정원 일부를 UCC로 옮겨 1단계로 총 600명을 선발하고 무전공, 무학과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등 파격적인 혁신안을 제시했다.

특정학과 중심의 캠퍼스 체제를 지양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중심으로 소수 다 품종 방식의 마이크로 디그리 전공 교육을 실시한다.

기존 대학 교육의 틀을 바꾸는 교육과정과 학습

코디네이트 프로그램, 학생 중심의 선택학기제를 도입한다.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산업체 JA 교원(Joint Appointment) 300명을 초빙하고 인사가교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지역과 지역 대학이 함께 힘을 모으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 초당대, 목포과학대와 함께 공공형 사립연합대학 신설을 제시했다"면서 "지방대학과 지역이 더욱 밀착해 산업 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지방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고,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광역 연합 부분에서 예비지정된 광주보건대·대구보건대·대전보건대는 보건 의료계열 전문대학간 단일 사단법인 설립에 기반한 초광역 연합을 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이들 대학은 (사)한달빛 글로벌 보건연합대학을 설립하고 사단법인이라는 단일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 교육·평가·학사 운영 등 연합체통을 통합 운영한다는 구상을 혁신기획서에 담았다.

/유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소상공인 꼼꼼 지원 광주 북구, 설명회 열어

고물가로 인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광주 북구가 팔을 걷어 부쳤다.

16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광주 북구 매곡동 커뮤니티센터에서 '소상공인 지원 기관·단체 사업 공유 설명회'가 열렸다.

설명회는 지원 기관의 정책과 사업 등을 소상공인 연합회에 적극 공유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북구, 광주·전남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시 및 5개 자치구별 소상공인 연합회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확대 운영, 소상공인 디딤돌 특례보증,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등 북구와 중앙·지방 등 총 9개 기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소개됐다.

한편 북구는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경제 회복 지원 TF'를 운영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발굴과 맞춤형 홍보를 하고 있다. /김대인 기자 kdi@



생존수영 배워요 광주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16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수영장에서 생존수영 수업을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벌목 작업 중 장흥 산불진화대원 사망 "군 책임 인정하라"

장흥민주진보연대

최근 벌목작업 중에 숨진 장흥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사고(4월 12일자 광주일보 6면)와 관련 장흥군이 부당지시에 따른 사고임에도 사고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흥민주진보연대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근로계약서상 사고를 당한 대원의 근무지는 '산림 및 산불현장, 산림보호사업지'로 명시돼 있으나, 군은 이를 벗어나 주택 인근에서 작업을 지시했다"며 "본래 업무도 '기타 산림사업 보조 및 지원'으로, 벌목

자의 작업을 지원하는 역할이었는데 군은 이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군은 '근로계약상 업무에 해당되는 작업을 했으며, 아침에 내린 비 때문에 '작업 대기'를 지시했는데도 무단으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문제 원인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단체는 "진화대원들은 그동안 엔진톱과 예초기로 인한 부상, 높은 나무에서의 낙상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당해 안전조치 문제를 지적해 왔

다"며 "하지만 군은 작업 현장에 총괄책임자도 배치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작업을 하게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오전 11시 장흥군 관산을 한 주택 인근에서는 A(64)씨가 동료 2명과 15m 높이의 참나무를 베던 중 쓰러진 나무에 가슴을 맞고 넘어져 숨졌다. 장흥군은 주택 주변 '위험수목(집중호우나 강풍 등 자연재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A씨 등 산불진화대원 15명을 보내 벌목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건 인사이트

"아빠한테 양육비 받아오라" 40대 친모 아동학대 징역형

양육비 받아 외제차 구입...거주할 곳 없어 모텔 전전

자신의 아들에게 이혼한 전 남편을 찾아가 양육비를 받아오라고 시킨 4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희석)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47)씨에 대해 징역 3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도 부과했다.

A씨는 2022년 2월께 둘째 아들(당시 12세)에게 '아빠에게 돈을 받아오라' 시켜 이혼한 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동유기·방임과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이혼 후 2019년께 전 남편으로부터 아파트와 양육비를 제공받으면서 둘째 아들을 홀로 양육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지난 2021년 전남남편에게 주택전

세자금 필요하다고 속여 3950만원을 받아 생활비와 고급 외제차 구매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자 고급 외제차를 저분하고 다른 차량을 리스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압류를 당하는 등 생활이 어려워지자 아들을 시켜 전 남편에게 돈을 받아오게 했다.

또 지난해 1월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 돼 거주할 곳이 없어 공원·아파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아들과 함께 잠을 자거나 모텔·병원 등지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돈이 떨어지자 LPG 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 충전하고 26만여원을 내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했다더라도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차량 등지에서 아이를 생활하게 한 것은 방임의 고의가 있었다"면서 "A씨의 행위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의회/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의회/발로 뛰고 행동하는 공감의회
남원시의회가 함께 합니다.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http://council.namwon.go.kr